

공공건축의 내일을 위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일시

2024년 6월 5일 14:00

참석자(가나다순)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김빈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유종수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진행

염윤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건축과 도시공간> 2024년 여름호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의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10년을 맞아 센터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 공공건축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이후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 온 제도적 노력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발전시켜 갈 것이라 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염윤진 건축공간연구원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이 2014년 6월의 일이고, 좌담회가 열리는 오늘이 2024년 6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공공건축과 관련된 관·학·산·연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여러분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센터 업무를 대면했던 때의 이야기나 소회를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전영훈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지원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TF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원, 그리고 센터와 함께 일했던 10년이 스쳐 갑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증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건축과 디자인 품질관리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결국 전문성을 갖춘 공공건축 지원기관 즉, 공공건축지원센터나 공공건축가 제도 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득하는 논리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속에서 센터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확장되어 왔고, 공공건축특별법안의 마련까지 외부 환경 변화에 부딪히고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10년을 걸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철호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 법정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건축공간연구원이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법정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연구원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건축기획 업무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공건축의 품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공공건축 조성 과정의 앞부분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했던 10년이 아닌가 합니다.

권지희 시작과 발전 과정을 두 분께서 충분히 짚어주셔서, 저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많이 늘어서

이제 전국에 10개가 넘습니다. 설립 준비사항에 대한 문의전화도 많은데, 지자체의 자발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가 크게 늘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를 넘어서면서 국가와 지역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센터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협력사업으로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관련한 기초데이터구축,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수행 등에 있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4월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크게 바뀌면서 심사총량제가 도입되고 심사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운영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1월에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공모 운영 및 지원을 포함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엄윤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공공건축지원센터장)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윤종수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건축사사무소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가 만나는 지점일 겁니다. 전국에 많은 공모전이 나오지만, 저희는 주로 총괄건축가가 있는 지역의 설계공모에 많이 참여하고 실제 설계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빈 총괄건축가 제도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설계공모에만 참여한다든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할지를 결정할 때 설계 공모의 기획 의도나 심사위원회 구성,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건축기획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설계공모나 합리적인 사업 운영 등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할 확률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공모’에 건축사사무소의 참여가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준비 과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소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열철호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검토한 것이 ‘쇼트리스트’ 방식인데, 간단한 참가의향서를 받아 1차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설계사무소만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참가의향서 평가기준은 어떻게



김빈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유종수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할 것인지 등 공정한 공모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겁니다. 공공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는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엄윤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10년 중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공공건축특별법의 추진입니다. 공공건축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영훈 공공건축특별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법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이 실효적으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부문의 건축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 기획에서 설계발주까지의 과정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 나아가 DB 구축까지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였고, 공공건축부터 선진적인 제도적 틀을 만들고 나면 일종의 낙수효과로 민간 건축과 건축산업 전반에 건강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분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가져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법정화함과 동시에 기존의 자문역을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에 공공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공공건축관리계획 수립, 발주 이후 설계의도 구현과 성과평가의 의무화, 선도사업의 실시와 우수 공공건축 선정, 그리고 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 의견수렴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유종수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안전성 검토나 추가 인허가·인증 관련 업무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단계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등 일선에서는 비용과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염철호 총괄·공공건축가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건축기본법」에서 총괄·공공건축가 같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이미 명시하고 있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총괄·공공건축가가 지역의 공공건축뿐 아니라 건축·도시·경관, 공공 디자인 등에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본다면, 공공건축만을 다루는 공공건축특별법보다는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건축특별법에는 공공건축에 한하여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을 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염윤진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다음 10년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공공건축의 품질 제고를 위해 앞으로 센터가 더 중요히 해야 할 역할, 풀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종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 업무 중에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현장에 가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나아가서 발주처의

장(長), 즉 결정권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결정권자의 선택으로 초기 설계와 상관없이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기획이나 설계의도 구현 제도처럼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과 과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건축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해왔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조성 전후 아카이빙이 꼭 필요할 겁니다. 또 그 대상이 건축상 수상작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상 여부보다는 공유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를 축적하고 자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권지희 담당자 교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경우를 보면 공공건축만을 담당하는 인원이 충분히 있는 곳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발주는 보육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보건시설 발주는 보건 정책과와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꽤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관련 지침 제시, 지자체 담당자의 교육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건축 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앞으로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훈 앞으로 공공건축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을 넘어 ‘시민이 사용하는 건축’으로 확장될 것이고, 설계발주뿐 아니라 시공과 유지관리 영역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겁니다.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다뤄야 할 공공건축의 대상과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인 공공건축 DB 구축, 관계자 교육, 산업 실태조사 등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량적 데이터의 축적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건축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 또한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문 성격의 업무들이 대거 법정 업무가 될 것이고, 설계발주 이후 단계와 관련한 업무 대응, 공공건축 기본계획



과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역할과 업역이 변화할 겁니다. 이때 센터 운영에 대한 인적·자원적·제도적 지원과 이에 대한 공감대,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초기 롤 모델로 삼았던 영국의 CABE, 프랑스의 MIQCP처럼 연구 기능이 분리된 실행기관이자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열철호 오늘은 연구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그간의 소회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그간 여러 난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질·품격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논의의 큰 주제처럼 공공건축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만이 아니라 정부부처, 지자체, 학계, 업계까지 여러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또한 많기 때문에 더욱 협업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